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태희



요즘 군 생활을 회고하는 일이 많다. 초병이 북에서 날아온 빠리를 주우면 내게 가져왔다. 내용은 차지하고 인쇄가 조잡하기 짜이 없었다. 단박에 낙후된 생산력을 수준을 알 수 있었다. 그 가운데는 특별히 제작된 것도 있었다. 특별한 사람의 초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닐 코팅을 했다. 우리는 이미 물에 잘 젖지 않는 종이를 만들 수 있던 때였다. 가소로운 느낌이 들었다.

6·25전쟁의 교훈이 무력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고 더욱 요원하게 한다는 것 일 것이다. 전쟁도발은 민족에 엄청난 희생과 깊은 상처를 남긴 민족적 죄악이었다.

전쟁 이후 남북은 동서남전구도 속에서 체제경쟁에 몰입했다. 반세기가 지나 체제경쟁은 판가름났다. 죽의 장막, 철의 장막이 걸어지고, 동서독의 장벽이 무너졌다.

지난 헌법정책 기간 동안 북한의 철조망도 살짝 열렸다. 북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제 북한 주민도 다 알아버렸다. 미흡하지만 조금 열린 틈을 통해, 남과 북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빠라나 확성기와 같은 것으로 애써 떠들 필요가 없게 되었다.

최근 천안함 사건은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매우 취약함을 단적으로 확인시켜주

제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악화시 키고 안전과 통일을 보장받는 틀로 활용 해야 한다. 문제는 결국 주인인 남과 북이 어떻게 주도하느냐이다.

북한체제가 곧 붕괴할 테니, 조금만 더 압박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 미소의 경쟁에서 압박정책이 성공 했다고 하는데, 고르바초프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면 과연 그렇게 진행되었을까? 동서독의 통일 과정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을까? 정권이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필시 마지막 밤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재앙으로 나타나지는 않을까?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보복과 응징을 다짐하는 말들이 쏟아진다. 대통령은 전

야 한다.

병사가 46명이나 죽었는데, 두 달 만에 원인을 밝히면서 북한의 소행만 탓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난 휴식시간에 귀신같은 북 잠수함의 기습에 당했을 뿐이고, 난 지난 정권이 주적 개념을 없애서 군기나 해이해졌을 뿐이고, ... 개그 같은 상황이다. 남 탓만 하지 말고 군 지휘부는 스스로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 정권은 남쪽을 향한 개방에 대해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 기조를 탓하며 그동안 풀었던 벗장을 하나씩 다시 닫고 있는 것이다. 자신감 부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취한 선택수단은 많지 않다. 우리가 최대한 견인하고 개입해야 한다. 관여수단을 많이 확보하고, 주변국에 우리의 연고권을 확증해야 한다.

안보논리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애당 지도자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동안 독재정권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 안보논리를 악용한 전례에 따른 피해의식이 뿐이다. 안보는 중요하고 전쟁의 안보논리를 내놓는 것이 공당의 의무 아닌가. 안보나 안보논리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일 수 없다. 우리 공동체 모두의 관심사이며 고민거리이다. 씨우지 않고 이기는 리더십을 추구해야 한다. 세 수 이상을 내다보며, 우리의 안보전략을 설계하고 통일비전을 제시할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다산연구소 기획실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보·통일 리더십이 필요하다

은 평계가 될 수 있다. 중국에게 북한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존재이다. 한미의 동맹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듯이,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도 북의 해 보유는 싫어한다. 중국의 북한 핵 경제는 우리 외교의 성과가 아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일종의 완충지대로서의 전략적 이익이 있다. 일본은 누구보다 분열된 한반도가 유리하다. 대북 대결정책이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준다. 한반도 분단에 관해 일본은 임진왜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적 연원을 갖고 있다.

다들 현상유지가 목표이고, 우리의 통일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다자협력체

제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악화시 키고 안전과 통일을 보장받는 틀로 활용 해야 한다. 문제는 결국 주인인 남과 북이 어떻게 주도하느냐이다.

북한 정권은 남쪽을 향한 개방에 대해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 기조를 탓하며 그동안 풀었던 벗장을 하나씩 다시 닫고 있는 것이다. 자신감 부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취한 선택수단은 많지 않다. 우리가 최대한 견인하고 개입해야 한다. 관여수단을 많이 확보하고, 주변국에 우리의 연고권을 확증해야 한다.

안보논리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애당 지도자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동안 독재정권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 안보논리를 악용한 전례에 따른 피해의식이 뿐이다. 안보는 중요하고 전쟁의 안보논리를 내놓는 것이 공당의 의무 아닌가. 안보나 안보논리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일 수 없다. 우리 공동체 모두의 관심사이며 고민거리이다. 씨우지 않고 이기는 리더십을 추구해야 한다. 세 수 이상을 내다보며, 우리의 안보전략을 설계하고 통일비전을 제시할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다산연구소 기획실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옴부즈맨 칼럼

김현석



동지방선거가 목표로 다가왔다.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다섯 번째인 이번 선거에서는 무려 여덟 명의 지역일꾼을 한꺼번에 뽑아야 한다.

최근 광주일보를 비롯한 모든 지방신문사가 많은 지면을 선거 관련기사에 할애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거주지역의 각종 후보자를 상세히 파악하고 정책을 비교한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다.

더구나 이번 선거의 초점이 주로 도지사, 시장, 군수 등 지자체 단체장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출에 대한 관심은 약간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경향도 있다. 처음으로 실시

당하는 1100여 명이나 되었다. 이를 종결반을 훨씬 넘는 약 750명이 지역구 시군구의원 후보였다 한다.

광주일보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전과경력을 보도하여 유권자가 육석을 가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전과자라 하더라도 민주화운동 정의 전과경력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하는 배려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통계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군구의원 후보에 대한 전과경력은 전혀 보도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현

기고

고호석



“아파! 어지럽네! 정말 어지러부네!” 시내 한 식당에서 어느 70대 어른의 푸념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의 모습을 가장 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번 6·2지방선거는 1인 8표로 처음으로 교육감, 교육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를 한데 묶어 치르게 되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구분하기조차 어렵다.

지방선거에 일반적으로 무관심한 유권자들이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더 관심을 쏟으면서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선거는 아예 실종된 것 같다.

후보 중에 혹시라도 교육현장 재직 중 가정문제, 음주운전 전과, 부적절한

다는 암시과 덕망 같은 도덕성이 더 중요한 선택 요인이 돼야 한다.

이러한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단지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선거비용을 절감하는 순기능도 있다지만 지방선거에 얹혀 치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일부 유권자들은 교육의원이 교육위원과 뭐가 다르고 심지어 교육의원 선거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유권자들도 있다. 유권자들의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절대 아닌 것 같다.

후보 중에 혹시라도 교육현장 재직 중 가정문제, 음주운전 전과, 부적절한

침밀꾼 뽑는 현명한 선택!

되는 주민직선 교육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유권자들도 상당이 있는 것 같다.

교육감은 예산, 인사, 정책집행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지닌 지역교육행정의 수반이다. 우리 사회의 유별난 교육열을 보더라도 누가 그 자리에 앉는가는 대단한 관심사일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및 이를 견제하는 교육의원 선거가 관심 밖에 놓여 있는 것은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흥보와 유세전을 전개하는 지자체장 선거와는 달리 이들 후보가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인 듯 하다.

그런 점에서 광주일보 지난 5월 17일자에 게재된 광주, 전남 교육감 출마자의 이수별 정책방침 비교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20개 학군에 걸친 주요 정책은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의 공약을 상세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보도함으로써 매니페스토 선거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지난 5월 13일까지 선관위에 등록을 마쳤다. 이들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분석에 의하면 출마자 중에는 전과, 병역미필, 최근 5년간 납세실적 전무(全無) 등이 결격사유를 가진 후보자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과자는 총 후보등록자 9900여 명 중 무려 12%에 해

당하는 1100여 명이나 되었다. 이를 종결반을 훨씬 넘는 약 750명이 지역구 시군구의원 후보였다 한다.

그러나 6·2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책임자와 그 감시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대선이나 총선과는 다른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택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최근의 몇몇 사례에서 우리는 씁쓸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지역주민에게 커다란 자괴감을 준 민종기 전 당진군수나 청렴과 도덕성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교육계를 복마전으로 만든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2006년에 실시된 4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203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에는 절반이 넘는 110명이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되어 31명은 이미 판결 확정으로 퇴출되었다.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 풀이다.

내일로 다가온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부패의 소지가 있는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출마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길 광주일보에 부탁드린다. 더 나아가 선거 후에도 지자체의 부정부패를 막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지역민과 함께 당선자를 견제해 가는 광주일보의 역할을 기대한다.

〈광주대 일본어학과 교수〉

처신으로 징계를 받은 후보자가 있어도 유권자가 육석을 가려내기는 쉬운 일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한다. 우리 학부모의 교육열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고 바로 이러한 열정이 오늘날 우리를 성공 국가로 만드는 기반이 됐다. 2세 교육의 현장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할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으로 출마한 후보라면 하늘을 우러라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 도덕적 자질과 수행능력을 점검 평가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없는 한 지방선거와 교육선거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정치적·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 비용이 들더라도 다음 선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주권행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교육을 정치적·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 비용이 들더라도 다음 선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주권행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은이 제대로 들어간 동전이나 부족한 동전도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 굳이 순은 동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일단 순은 동전은 집에 보관해 놓고 악화만 사용하는 바람에 마침내

선거 입후보자 자원봉사활동으로 귀감돼야

선거운동 기간에 무차별한 확성기 소음을 주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 이러한 선거 운동 보다는 평소에 봉사활동을 많이한 후보자는 말할지도 않고 입후보자 모두가 선거 운동기간을 이용하여 소외 받은 사람의 고충과 아픔을 들어주고 말벗이 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오는 6월 2일이면 지방선거가 진행된다.

일상생활의 복지 즉 경제복지, 생활복지, 문화복지 개념 등으로 글로벌시대에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입후보자들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가를 유권자 층면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입후보자들이 지성인이고 오피니언 리더라고 볼 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김미령·광주시 남구 월산동

시설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로 외국인 유치해야

관광 인프라 확충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 인프라 부족만 탓하고 있으면 시간이 촉박하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미지의 땅이라는 장점과 세계적 생태습지인 순천만을 비롯한 자연환경, 슬로시티와 낙안읍성 등 독특한 민속문화, 남도음식은 물론 바 있다.

광주·전남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규모 숙박시설 등이 부족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광주·전남 지역 관광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따라 예정돼 있다. 올해 F1대회가 개최되고, 2012년 여수엑스포,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대규모 이벤트들이 전남의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은 경쟁력이 충분하다.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역시 중국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시장으로 성공한 케이스다.

청소년·여성 흡연 줄일 대책 서둘러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금연을 위한 캠페인과 대책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인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은 줄지 않고 있다. 19세 이상 여성 흡연율은 2001년 5.2%에서 2004년 7.4%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남성 흡연율은 60.9%에서 47.7%로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소년도 고등학교 2학년의 흡연율이 무려 21%로 성인 남성 흡연율의 절반에 가깝다.

정부는 청소년과 여성 흡연을 줄일 수 있도록 주변환경의 정비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학교 등 공공장소나 가정에서 청소년과 여성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의 흡연은 더욱 치명적이다. 자신의 건강은 물론 임신과 출산 등의 과정에서 새로운 생명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에 따르면 흡연여성은 자궁암을 비롯한 각종 암에 걸릴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며 여성의 결리는 암의 10%가 흡연 때문이라고 한다. 별 의식 없이 피운 담배가 자신과 귀중한 2세에게 돌

無等鼓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문구다. 유명한 ‘그레셤의 법칙(Gresham's law)’이다.

그레셤의 법칙은 선거판에도 적용된다. 훌륭한 인품, 실현 가능한 공약을 두루 갖춘 후보를 ‘양화’라고 치자. 반대의 경우가 악화다.